

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美 118대 의회 중대 정책의제

- ◆ 118대 미국 의회가 1월 3일부로 출범
- ◆ 하원 상임 위원장 전원 공화당 의원으로 교체, 정부 견제 강화로 의회 교착 전망
- ◆ 강경파 세입 위원장 등장으로 바이든 무역정책에 난항 예상
- ◆ '24년 대선을 앞두고 대중 견제 정책에는 초당적 협력 전망

1. 조사 배경

- 지난 11월 중간선거 결과 118대 미국 의회가 1월 3일부로 출범
 - 양당은 상·하원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등 구성 절차 진행 중
 - * 공화당 하원('22.11.15) · 상원('22.11.16) 지도부 선출 ⇒ 민주당 하원('22.11.30) · 상원('22.12.5) 지도부 선출
⇒ 하원 의장 선출(1.7) ⇒ 하원 운영규칙 통과(1.9) ⇒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 주요 위원장 선출(1.10)
⇒ 하원 상임위 소속 공화·민주당 의원 수 비율 합의(1.17) 등
- 로비, 로펌, 언론 등 현지 기관은 118대 의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제기
 - (1) 상·하원 지도부 구성 현황, (2) 중요 상임 위원장 교체, (3) 중대 정책의제 및 분야별 쟁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음.
 - △분할 의회 환경, △정치 양극화 심화, △공화당 강경파 득세, △야당의 행정부 감독 강화 등 의회 교착 연출 ⇒ 중대 입법 난항 전망 ⇒ 일부 초당적 의제를 제외하고 행정부 직권으로 정책 추진 가능성

2. 주요 내용

① 양당 상·하원 지도부 구성

- (하원) 공화당 다수당 탈환 결과, 공화당이 하원 의장과 상임 위원장 독차지
 - 공화당은 Kevin McCarthy(하원 의장), Steve Scalise(다수당 대표), Tom Emmer(다수당 원내총무) 등으로 원내 지도부 구성

- Hakeem Jeffries(소수당 대표), Katherine Clark(소수당 원내총무), Pete Aguilar(의원 총회 의장) 의원 등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출현
- (상원) 이전 117대 의회 지도부에서 큰 변동사항 없음.
 - 다수당 대표와 원내총무에 Chuck Schumer와 Dick Durbin, 소수당 대표와 원내총무에 Mitch McConnell, John Thunem 의원 유지
 - *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에 민주당 소속 Patty Murray 의원 선출

< 118대 의회 양당 지도부 >

		하원				상원									
		다수당	소수당	다수당	소수당	다수당	소수당	다수당	소수당						
Speaker Kevin McCarthy	(Calif.)	Majority Leader Steve Scalise	(La.)	Majority Whip Tom Emmer	(Minn.)	Conference Chair Elise Stefanik	(N.Y.)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N.Y.)	Majority Whip Dick Durbin	(Ill.)	DPCC Chair Debbie Stabenow	(Mich.)	Steering Chair Amy Klobuchar	(Minn.)
Minority Leader Hakeem Jeffries	(N.Y.)	Minority Whip Katherine Clark	(Mass.)	Democratic Caucus Chair Pete Aguilar	(Calif.)	Caucus Vice Chair Ted Lieu	(Calif.)	Minority Leader Mitch McConnell	(Ky.)	Minority Whip John Thune	(S.D.)	Conference Chair John Barrasso	(Wyo.)	Policy Chair Joni Ernst	(Iowa)

[자료] 블룸버그 GOV

② 상임 위원장 교체 현황

- (하원) 상임 위원장 전원이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교체
 -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4개 상임위원회(세출, 규칙, 에너지 · 상업, 세입 위원회) 중 세입 위원장 교체에 관심 집중
 - * 세출, 규칙, 에너지 · 상업 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게 됨.
 - 새 세입 위원장에 친트럼프 성향 강경파 Jason Smith 의원 선출. 직전 부위원장인 온건파 Vern Buchanan 의원과 경쟁에서 승리
 - 세제 · 무역 이슈를 주관할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 노동자 우선, △대중 강경책, △감세 확대 등 과거 트럼프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찬동

- * 스미스 위원장 6대 경제 의제(성명서 1.9) : (1) 미국인을 위한 세금 정책 가동 (2) 국세청(IRS) 감독 강화 (3) 공급망 리쇼어링 (4)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 (5)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6) 복지보다 고용 확대에 중점
- (상원) 4대 핵심 위원장직(금융, 세출, 법사, 외교)에서 세출 위원장을 제외하고 기존 민주당 소속 위원장 유임 확정
 - 이전 세출 위원장 Patrick Leahy 의원 은퇴로 Patty Murray 의원이 승계

< 상 · 하원 핵심 상임 위원장 선출 현황(전망)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하원	세출	Kay Granger (공-텍사스)	Rosa DeLauro (민-코네티컷)
	규칙	Tom Cole (공-오클라호마)	Jim McGovern (민-매사추세츠)
	에너지 · 상업	Cathy McMorris Rodgers (공-워싱턴)	Frank Pallone (민-뉴저지)
	세입	Jason Smith (공-미주리)	Richard Neal (민-매사추세츠)
상원	금융	Ron Wyden (민-오레곤)	Mike Crapo (공화-아이다호)
	세출	Patty Murray (민주-워싱턴)	Susan Collins (공화-메인)
	법사	Dick Durbin (민주-일리노이)	Lindsey Graham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외교	Bob Menendez (민주-뉴저지)	Jim Risch (공화-아이다호)

[자료] 미국 의회, Akin Gump 등

③ 중대 정책의제 및 쟁점 사항

① 농식품 정책

- 연방 식량 구호 프로그램과 농가 지원 예산을 위해 5년마다 개신하는 'Farm 법안' 입법 기한이 올해 9.30까지로 임박
- 하원 공화당은 저소득층 식품 구매 지원금, 농업 기후변화 대응 예산 등 삭감을 주장,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연내 통과 유력시

② 세출법안 통과

- '24년 회계연도 세출법안 통과에 민주-공화 간 지루한 힘겨루기 예상
-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후 위기, 교육, 보건, 에너지 등 예산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 고조 예상

- 공화당은 국방, 환경, 복지 등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 세출법안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③ 정부부채 상한선 인상

- 1.19부로 '21년 인상됐던 정부부채 법정 상한(31.4조 달러) 도달 예정.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정부 파산 위험을 6월경까지 연기 가능
-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 인상 조건으로 '23년 정부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정부는 타협 가능성 일축 중

④ 에너지·기후 정책

- 하원 공화당이 주장하는 화석에너지 개발, 재생·소형 원자로·수소연료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에서 부분 합의 가능성 전망
-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 조사 예고
 - * 인프라법 및 IRA법 집행, 에너지부 기후 프로그램, 증권거래위 기후공시 제도 등

⑤ 외교 정책

-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국제 경제 침체 및 정치 불안, △식량·에너지 위기, △테러리즘 방지, △기후 위기, △사우디·이란 등 중동 관계,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 등 당면과제 산적
- 하원 공화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코로나 백신 제공, △대중 수출통제 등 바이든 정부 정책 감사 공언 중

⑥ 세제

- 공화당 하원 장악으로 바이든 정부의 본격적인 세제개혁(법인·부유층 소득세율 인상, OECD 국제 법인세 합의 이행 등) 관철은 어려울 전망
- 하원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국세청 예산 증액, IRA 자동차 및 친환경 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예정

⑦ 테크놀로지

- 민주·공화당은 사이버보안, 광대역망 확대, 개인정보 보호, 거대기술기업(빅테크) 규제 등에서 초당적 협력 예상

⑧ 무역·투자

- 바이든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및 비전통적 무역협정* 추진 지속 예고

*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 등

- '24년 대선에 대비 양당 모두 강력한 대중 정책 수립 제고 확실시. 하원 미·중 경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연내 대중 전략 완성 예정
- 대중 기술 견제를 위해 수출통제, 대중 투자 감독, 노동·환경 관련 수입 규제 강화 관련 추가 입법 및 행정 조치 예고

< 118대 의회 무역·투자 정책 법안 통과 전망 >

정 책	★(가능성 작음)	★★★★★(가능성 큼)
수출통제 및 집행 강화 법안	★★	
무역촉진권한(TPA) 부활 법안		★★★
영국과 무역협정 추진 명령 법안	★★	
CPTPP 협상 추진 명령 법안	★★	
대만과 무역협정 추진 명령 법안		★★★
코로나19 원인 규명 법안		★★★★★
중국 기술기업 규제 강화 법안		★★★
미국의 대중 투자 감시 법안	★★	
미국 대만 정책 개혁 법안		★★★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법안		★★★
중국의 지재권 탈취 조사 법안		★★★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법안		★★★
핵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 법안		★★★★★

[자료] Hogan Lovells

* 자료 : Akin Gump, Arnold&Porter, Gibson Dunn, Squire Patton Boggs, 블룸버그 GOV, The Hill, Roll Call, Foley&Lardner, Hogan Lovells 등